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4/2℃ 목포 -3/2℃ 여수 -4/2℃

단기 4342년 (음력 11월 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51호 1판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민주 4대강 반대…영산강 속탄다

"MB정부 이전부터의 숙원사업"

지역민, 3대강과 분리 대응 촉구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탄생 이전부터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분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면〉

16일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관련 예산 통과를 저지함에 따라 영산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응 전략 부재 때문에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한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한다'는 등의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민 사이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250만 영산강·섬진강유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낙동강과 한강을 잇기 위한 대운하 사업 간 구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썩어가는 영산강을 방치할 경우 처러야 할 대가가 클 뿐 아니라 영산강 유역의 인구 이탈 및 지역 낙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한강·낙동강·금강은 2급수를 유지하는 반면 영산강만 4~5급수 수준이며 홍수 위험도도 영산강이 4대강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오는 2011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동강은 1억2천만톤, 영산강은 5억4천만톤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보여 영산강의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는 부분을 강조,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사업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을 부정 또는 반대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변경·축소·수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운하 반대 주장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재원배분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낙후지역 발전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초점 맞출 경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며 이 경우 4대강 사업과는 상관없이 영산강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 다른 전남지역 의원은 이와 관련,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4대강별로 적정규모 수준에 맞도록 각각 축소 또는 조정하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교육·보건·복지를 포함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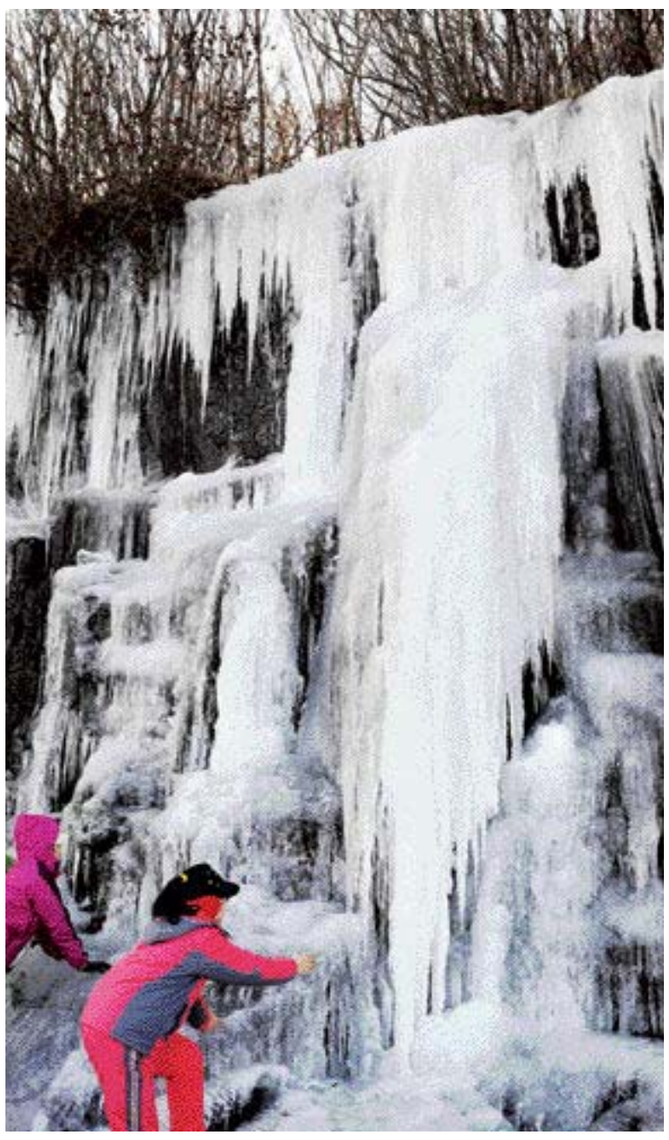
민주, 대통령+여야 대표회담 수용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락하면서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정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며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정국 타개 모임을 가질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제안에 민주당은 전격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의 책임자들이 대화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회담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만남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회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일정을 감안한다면 오는 19일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파가 만든 빙벽 광주 지역 기온이 영하로 뚝떨어진 16일 무등산 장불재 인근 바위들이 빙벽으로 변하자 등산객들이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광주 지역 수은주는 영하 4.6도를 기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015 U대회 영어 자원봉사자 2만명 양성

광주 중학생들 관심 뜨겁다

市 '영어 스쿨' 개설…외국 견학 특전 등 지원 몰려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에서 활약할 영어 자원봉사자 2만명을 양성한다.

광주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5하계U대회 사업설명회를 갖고 내년 3월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어 자원봉사자 2만여명 양성을 목표로 잡고, 내년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전액 무료 영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위해 시는 중학생 192명을 선발해 내년 1월4일~8일까지 전남대와 조선대 언어교육원에서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학교장 추천을 받은 특별전형(96명)과 공개모집하는 일반전형(96명)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공모에 들어간 일반전형은 이미 정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광주시내 전체 중학교 84곳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영어스쿨을 편성해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은 회화 중심으로 외국인 강사가 도맡게 되며, 본격적인 영어스쿨 운영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는 전남대가 맡고 있다.

시는 수강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해 동·하계 방학 때 전남대와 조선대 등 어학교육원에서 집중 학습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시가 중학생들을 외국어 자원봉사자로 집중 양성키로 한 것은 이들이 U대회가 열리는 해에 대학에 진학, 사실상 U대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교육 목표는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다.

시가 영어스쿨 수강생 가운데 우수 학생·일반인을 선발해 오는 2011년 중국 선전, 2013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U대회를 견학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것도 이같은 차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생·일반인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각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지에도 영어스쿨을 개설할 계획이다.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을 운영함으로써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된 가정의 자녀들이 무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스·전기료, 국제에너지價 연동 부과

기재부 내년 업무계획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사용자들도 이에 연동해 비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서 써야 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소득세는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내년에 검토되며 종합부동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희망근로를 6개월 연장하고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정부는 우선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리는 식이다.

그동안 서민생활을 고려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공기업 등에서 경영효율화 등으로 흡수하도록 지도해왔는데 이 때문에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제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아껴쓰려는 인식도 희박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경우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가격이 들썩이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초 발표대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제58기 수습기자 및 경력사진기자 최종 합격자

▶수습기자=김 호, 양수현 ▶경력사진기자=김진수

光州日報社